

정전 방지에 모두가 힘 쓸때

최근 정부가 올 겨울 전력대란을 예고하며 전 국민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동절기(12월 5일~2월 29일)동안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에 머물고 특히 전력수요가 급증할 내년 1월 2~3주에는 안정적 예비전력이 100만kW 이하(53만kW)까지 하락해 예비율이 1%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월 15일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지 석달이 다 돼 간다.

정전 발생 후 정부 및 관련기관은 정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못 내린 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긴급 소집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지경부 장관의 사과와 전력수급 상황이 급변할 것으로 예측하지 못해 사전예고도 없이 순환정전의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 주를 이루고 나흘 후 9월 19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는 정전 책임과 전력산업구조개편 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설전이 오갔다.

특히 지난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전력거래소로 수급 계획 및 발전소의 운전과 정지를 비롯한 전력계통의 운영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계통 운영권한을 한전에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으며, 정전 사태와 관련해 실무자들에 대한 중징계도 단행됐다. 이제 우리는 이번 정전 사태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올 겨울 이상 한파 등에 따른 동계 피크 대비는 '발등의 불' 처럼 위기상황이다. 정부 및 관련기관 등은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지금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가 전력 낭비를 막는 절전을 몸소 실천해야 할 시점이다.

국내 풍력인증 외면...대안 마련해야

최근 국내 풍력발전 인증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다. 풍력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구매자 등의 요구에 의해 국제인증을 획득하고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인증기관의 신뢰도를 낮게 보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인증기관을 이용할 경우 폐해 중 하나는 기술력 유출 및 국부 유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풍력발전기 관련 기술 중 상당부분이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개발된 것이어서 세금으로 개발된 기술이 해외 인증기관으로 합법적으로 유출되는 경로가 될 수 있다. 설계평가는 국내 인증기관의 경우 3~5억 원의 비용과 3개월의 인증기간이 필요하지만 해외 인증기관의 경우 10~15억 원이 소요되며 인증기간도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된다.

지식경제부는 정부 주도 사업에 국내 인증체계를 거친 경우에만 설치를 허가하는 쿼터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자국 기업에게만 혜택을 제공한다는 형평성 논란에 고심하고 있다. 기업들은 국내 인증기관 이용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쿼터제 방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나 인센티브 혜택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들은 정부가 국내 인증 시행 비용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길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적 풍력인증 체계 구축이 국가의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고 장기적이면서 적극적인 인증 육성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KEA